

한반도 주변 정세와 평화구축의 과제

일 시 : 2003년 5월 7일(수) 오전 8:00~11:00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사 회 : 정영태(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토 론 : 김근식(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수(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태현(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박기학(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정육식(평화네트워크)

● 정영태 | 이른 아침 멀리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주최측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놓고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주변 강대국의 사회경제시스템, 성향, 정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의 침략이나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는 주변강국의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민주주의 국가와 전제군주국의 호전성을 비교하라는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질문이라고 보이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나 왕정은 정치제도이고, 이것 자체만으로는 평화애호나 호전적이나를 평가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시스템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1차·제2차 세계대전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 간 전쟁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도 '해방전쟁'을 합니다만, 20세기의 역사를 보면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자본주의 국가가 전쟁을 도발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좌담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얘기는 국제정세와 주변강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먼저 김태현 교수님께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중심으로 주변 정세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한정책

● 김태현 | 사실 제가 미국 평화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미국 교수 한 분과 한반도 안보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그 미국 교수분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도 하고 강

연도 하면서 일 주일 정도를 같이 보냈어요. 그 분은 원래 미국의 중동정책이 전공인데 아무래도 미국외교정책에 대한 감이 있으니 북한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겠죠. 그분 얘기 중 하나가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가지려면 가져라,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북한이 핵물질을 가져서 그것을 중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제 아침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시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 바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외교에 대해 새삼 체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로즈노의 외교정책 '전이론(前理論 pre-theory)'을 보면 작은 나라는 국제체계차원의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큰 나라는 국내적인 변수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미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국의교를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체계차원인데, 92년에 케네스 윌츠는 탈냉



탈냉전기 미국외교는 모겐소 식으로 보면 점점 더 공세적으로 될 것으로 봐도 좋죠.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권력욕이 있는데 국내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세력도 있고 제도적 장치도 있고 해서 억지가 되는데, 국제정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적나라한 권력정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 김태현

전기 미국외교는 냉전시에 보여줬던 일관성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소련이라는 견제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일관성을 잃는 게 아니고, 한스 모겐소 식으로 보면 점점 더 공세적으로 될 것으로 봐도 좋죠. 모겐소가 뭐라고 했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한 권력욕이 있는데 국내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세력도 있고 제도적 장치도 있고 해서 억지가 되는데, 국제정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적나라한 권력정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권력욕이 있으니까, 민족주의로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자기 나라의 공세적 외교에서 대리만족을 얻는다

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경우 전쟁이 본토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미국민들은 마치 월드컵을 즐기듯 전쟁을 즐기고 응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미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외교의 변화나 추세를 보려면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는데, 부시 대통령의 경우 집권 초기에는 국제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니와, 국내문제를 제치고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두드러진 국제적 현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데, 9·11테러가 그런 인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국가안보 문제, 특히 테

러와의 전쟁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외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 소위 '네오콘 Neo-con'의 입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미국의 강성적·공세적 외교에 이념과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라크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으니 앞으로도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봐야죠.

미국외교정책을 얘기하는데, 흔히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외교문제를 현실주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권문제와 같이 도덕적 가치를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죠. 이들은 힘의 한계를 인정해 다자주의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도덕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미국의 힘을 신봉해 미국이 신봉하는 가치를 위해서는 그 힘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 **정영태** | 미국의 그런 외교노선이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부시 이전과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 **김태현** | 기본적으로 탈냉전으로 미국외교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냉전기에는 무엇보다 소련과의 경쟁이 중요하고 제3세계 국가들도 그 맥락에서 봤거든요. 한·미 동맹도 그런 도구적 시각으로 볼 수 있죠.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제3세계 국가의 도구적 가치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든 중동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냉전시에는 소련과의 각축장으로서 중요했는데, 지금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테러리스트의 온상으로 그렇습니다.

부시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인정하겠다, 다만 그것을 수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은 미국을 상대로 사용하는 데 어느 정도 역지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북한은 실체가 있는 나라죠. 영토도 있고 평양에 가면 지도부도 있고. 따라서 보복의 구체적 대상이 있으니 사전에 억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2002년 9월에 나온 안보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억지할 수 없는 집단, 특히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테러집단은 국가처럼 뚜렷한 실체가 없고, 또 자살공격을 감행하니 이들에게 보복의 위협을 통해 억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및 수출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반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는 부차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 **김근식** | 지금 김태현 교수님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방금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합의된 외교정책이 대량살상무기의 이전 자체를 막는 것이고, 통제불가능한

테러집단 등에 옮겨지는 게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접근했던 방식과 기본목표와 달리 부시 행정부에서는 한계점을 후퇴시키면서 한반도의 북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작년 10월 이후 북한 핵문제가 부각된 이후 북·미 간에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던 논쟁점, 즉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핵보유 불용이라는 원칙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부시가 이번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확산만 막겠다고 얘기한 것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부시 행정부의 이른바 매과·강경과 입장에서 북한이 이번 3자회담에서 제시한 대범한 제안의 내용이 상당히 유효한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범한 제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에선 오히려 돈 안 들고도 손 안 대고도 코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받을 수 없고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른바 부시 내부의 강경파들이 있고, 이들은 핵보유를 인정하고 한계점을 후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북한이 아무리 까불고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나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요?

뒤집어 말해보면 미국 내 매과가 원하는 북한체제의 붕괴나 정권교체를 위해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협상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고 다만 지금 당장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들고, 따라서 공격을 못하면 그 다음 미국이 원하는 북한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사작전이 되는 것이죠. 고사작전이 뭐냐하면, 북한이 제안한 나름의 의미 있는 제안을 무시한 채 당장 군사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시시콜콜한 제안에 대응하지 않는 식으로 위기에 처한 북

한을 말라 죽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시는 본질적으로 북한이 제기한 나름대로의 건설적 제안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핵불용이 아니라 핵수출 방지로 한계점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욱식 | 저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9·11테러가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변화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여년간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정책 보고서를 보면 일관된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부시 때부터 국방부장관과 차관 등 이런 사람들이 작성했던 국방부 내부문건이나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서 2000년에 나왔던 부시 정부의 외교정책 보고서를 지금의 정책과 이어보면 일관된 흐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9·11테러는 부시의 대외정책을 강화시켰다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만들어 왔던 기존의 전략 자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됐습니다. 대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하지만 실



그러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무시하고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침략전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계적 저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박기화

제로 군비지출의 성격을 보면 테러와의 전쟁에 쓰이는 예산은 극히 일부입니다. 군비지출의 내용을 보면 군사패권주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쪽에 군비가 집중됐다는 점을 이미 알 수 있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매년 2백억 달러 안팎의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2003년 4천억 달러, 2005년에는 4천5백억 달러, 2006년에는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군비증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역지가 통하기 때문에 북한 핵은 용인하고 이를 억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관료들이 악의 축 발

언이나 MD를 정당화하면서 했던 말은 북한 같은 악의 축은 억지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비이성적인 국가이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먼저 공격하는 것에 대비해 M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지가 통한다고 한다면 부시 행정부가 사활을 걸고 주장하는 MD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공격할 때 핵무기로 보복해야 할 것 아니에요. 4년 전 미국 외교의 기본전략이었던 핵 보복전략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시 정부가 발언한 내용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특정 사

안마다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수사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단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전에는 억지력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억지력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방금 전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용인하더라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관점이 전제된 것이지, 알카에다에게는 억지력이 안 통하고 북한에게는 억지력이 통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정수** | 저는 미국의 핵관련 전략이 동북아시아의 핵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21세기의 가상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네오콘의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는지요?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고, 그것이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동북아 핵문

제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얽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네오콘 같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핵경쟁 즉,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까지도 포함하는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MD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명분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명해야만 미국 전략의 총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 지금 과연 미국의 전략이랄까, 그 중심이 중동이나 서남아시아 쪽으로만 몰려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기학** |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자신의 군사전략을 억지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에 대해 선제공격을 단행했고 이어 지난 해 9월에는 이를 아예 국가안보전략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 이후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위주로 하는 자신의 선제공격전략이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더욱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을 신속배치군 형태로 구조개편을 꾀하는 것이나, 지하 시설 파괴용 소형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무시하고 세계 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침략전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계적 저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 4월의 실업률이 6퍼센트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8년 전 12월의 최고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03년 1월 무역적자가 4백1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위로 따지면 4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에요. 한 해 재정적자도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로서는 이런 국내 경제문제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

● 정영태 | 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특별히 논의할 게 있으면 논의하는 방식으로 하죠. 지금 말씀들을 들으니깐, 대체로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주로 미국의 정책이나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좀더 구체화해, 한반도에 대해 갖는 미국의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태현 | 사실 저는 정치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교란 따지고 보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기준은 곧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부시에 대한 지지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
이죠. 미국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이나 테러조직과의 연계, 인권탄
압 기록 등을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
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이라크를 공
격하게 된 핵심은 이라크가 지금 가
장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
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손쉬운
승리의 기회를 본 거죠.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도 있다고 한 것은 일종의 외교목표
를 낮춘 것이 됩니다. 북한이 핵을 보
유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정책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불용이라고 하면 검증을 해야 하는
데 그 검증도 만만치 않죠. 미국이 들
어갈 것인가, 유엔이 들어갈 것인가,
어느 선이 완전한 검증인가 하는 온
갖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미국
이 위기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죠. 한
편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도
핵을 가지고 중국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북핵보유로 인해 더욱
급한 것은 중국이고 한국이니 너희들

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하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 김근식 | 북핵보유를 사실상 인
정할지도 모른다는 이번 『뉴욕타임
스』 보도는 미국의 대북 목표를 오히
려 변경함으로써 협상을 요구하는 북
한에게 협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의미를 갖습니
다. 북한이 핵사찰 등에 대해 가시적
인 조치를 취하면, 즉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해야 하고 북한과 평화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 북한과 어떤 경우에도 협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엣그제 3자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에 요구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
에 대해서 북한이 응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런데 그것은 북한 체제의 회생을 뜻
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내 매파와
온건파 사이의 주도권 싸움에서 매파

의 명분이 관철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그런 상황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를 끊임없이 변경하는 식으로 일종의 무시정책, 즉 어떤 경우에도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요구했던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대화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했던 것을 하겠다고 해도 절대 대화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 **정영태** | 그러면 미국이 언젠가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 **김근식** | 전쟁이라는 방식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으로서도 노무현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라크와 달리 전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매파들은 북한을 이라크 식으로 교체하거나 없애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죠. 일부에서요. 그래서 북한을 교체하거나 개조하고자 하는 유혹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전쟁이 아니라면 고사작전이죠. 협상을 계속하지 않는 거고, 미뤄나가는 것입니다.

● **김태현** | 미국 내부에서 강경파 건 온건파건 똑같이 취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1994년 이후 농축우라늄을 활용해 핵을 개발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을 되돌리는 데 미국이 보상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박기확** |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이 끝난 뒤 이 같은 대북 정책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하는 데는 이라크와 비교할 수 없는 북의 무장력, 한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견조율, 대북공격 준비에 소요되는 준비 기간, 미국의 내년 대선, 이라크에 대한 미군정체제 정비의 진척 정



도 등 고려할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 북한에게 무력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그 제재 수위를 높여 갈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북에 대한 해상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미티지 보고서에도 해안봉쇄, 북한 선박에 대한 나포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침략행위거든요. 유엔의 총회 결의(1974년 12월 14일 결

의 제3314호)에 따르면 “일국의 군대에 의한 타국의 항구, 연안의 봉쇄” “일국의 군대에 의한 타국 영역에의 폭격, 기타 무기사용” 등은 침략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전계획 5027(2002년 판)은 한·미연합사의 대북 전쟁계획인데도 미국은 한국과 상의 없이 북을 공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의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북을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정육식 |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용인한다고 한 것은 일단 한시적으로 용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습 중의 하나는, 만약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했을 경우 그 사실에서 손실을 보게 될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북한 핵무장에 따른 손실이 큰 나라일수록 미국의 대북 제재 입장이라든가 봉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이 그런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공존하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따라라. 설사 이런 부분을 한국이나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북한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중

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의 대북한정책의 노선이 상당히 불안하고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쓴 논문 가운데 하나를 보면, 부시 행정부가 집권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나 이라크와는 협상을 하지 말고, 이들 국가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을 관철시키고, MD 전략을 공세적으로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의미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직후 이것은 MD와 관련해 일본을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D는 일본하고 2004년까지 연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개발로 넘어갈 상황인데, 미국은 일본에 MD를 협박하면서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와중에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2003년 여름까지 패트리엇 최신형을 배치하고 내년 이맘때까지는 그것보다 더 확대되는 PAC-3 시스템이나 이지스 요격체제로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콜린 퍼월이나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상대해 왔던 관리들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목표가 정당하더라도 콜린 퍼월이나 온건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라크와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이라크의 경우 미국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라크와 전쟁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후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합의된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군사행동의 목표가 병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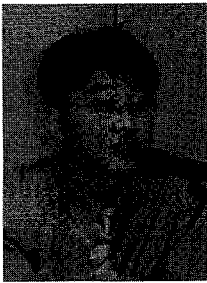
예를 들어 럽스펠드 지문위원인 토마스 바넷은 “이라크 이후의 북한에 대한 외교는 확실하다. 단 이것이 군사적으로 많은 것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갈 것이다. 외교적이라는 건 중국을 설득해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김정일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행동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사실상의 플랜 B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랜 B가 실행된다면 한반도는 전쟁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과연 노무현 정부나 중국이 북한의 무력사용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냐 이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은 한반도의 전쟁도 핵도 모두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둘 중의 하나 어느 것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미정책과 정책목표

● 정영태 |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평화가 유지될 것이냐는 주로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북한의 대미정책, 그리고 북한의 다급한 과제가 무엇이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 북한의 정책목표와 대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1998년 김정일 정권의 승계로 마무리되면서 곧 김정일 식 북한의 전략이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은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체사회주의 플러스 실리, 즉 실리사회주의를 통해 경제 회생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 김근식

● 김근식 | 저는 이미 탈냉전 직후,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지도부의 대외정책이 냉전시대 중국과 소련에 의지했던 진영외교를 탈피하고 전방위적 외교로 나아갔으며, 북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호적인 대외 관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식의 경제 회생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정책 목표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는 그것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모색이 1998년 김정일 정권의 승계로 마무리되면서 곧 김정일 식 북한의 전략이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회주의는 그대로

로 유지하되 주체사회주의 플러스 실리, 즉 실리사회주의를 통해 경제 회생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난해의 신의주 특구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북·일 정상 회담 등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 이전부터도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활로 모색, 기타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해서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회생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데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 하면, 대외조건이 이 프로그램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내적인 동력에 의해서 사회적 변화와 개혁을 하

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의 개선, 그 중에서 북·미 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북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 지도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작년 10월에 나타난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북·미 관계의 돌발사태도 북한이 펼친 외교적 전술이라고 봅니다. 작년 10월 켈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켈리는 북한한테 자기가 필요한 얘기만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켈리가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불이행을 북한에게 추궁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제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미국에게 했던 것이지요. 다시 또 북한과 미국은 이번 3자회담에서 어렵사리 만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미 관계를 어떻게든 풀고, 다시

북한이 체면이 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일 체제의 유지만 보장해 준다면, 상당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세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거기에도 또 하나의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핵보유 시인 사태였죠. 그 부분이 미국 매과에게는 굉장히 좋은 발미를 준 것이구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체제 생존의 명운을 걸고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풀어야만 대외 환경의 개선과 대내적인 경제회생전략 프로그램의 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양보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김정수** | NGO차원에서 보면, 지난 3월의 '3·1민족대회' 당시 북쪽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여성부문에서 남북한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만드는 논의가 있었어요.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대개 핵문제에 대해서 반핵과 반전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일련의 협



북한의 향후 전략을 논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선이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최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지렛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욱식

의과정에서 반핵은 저희가 공동성명에 집어넣지 못했어요. 북의 공식적 입장에서 보자면 핵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대응하는 자위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여성들의 한반도평화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핵문제를 거론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끝내 남쪽에서도 더 이상 핵문제, 즉 반핵에 대한 남쪽의 입장을 성명서에 반영하지 못한 채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막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을 성명서에 넣는 차원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은 미국과 핵협상을 계속하면서, 남쪽 민간단체와의 교류에도 계속 나오고자 할 것입니다. 평화는 곧

전쟁반대라는 절박한 명제 아래 북쪽이 남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강력한 전쟁반대 목소리와 경제적 지원이 아닌가 싶어요.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핵문제는 북·미 간의 협상과 대화의 문제이고, 남북 간에는 민족공조를 통해 전쟁의 위협을 막고 경제문제를 협력하는 것, 이렇게 이원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북쪽이 남쪽에서의 전쟁반대 목소리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마치 우리 정부가 미국과 무역협상이나 주한미군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때 국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대미 협상력 제고에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합니다.

● 정육식 | 북한도 핵무장이 별도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내린 결론으로서, 이미 제네바 합의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협상을 통한 체제안정 보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 북한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북한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힘만이 살 길이다'라는 내부 전략가들의 생각에 따라 물리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미국과 담판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런 방법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향후 전략을 논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선이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최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지렛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흔히 북·미 간의 위험한 게임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에 비유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줄다리기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북한은 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미국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미국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의 입장은 그겁니다. 북한은 줄을 당기면서 미국이 언제까지 버티겠느냐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리고 북한도) 줄을 아예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정영태 |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기학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 박기학 | 이른바 북한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있습니다. 북의 일관된 입장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2개

가져보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동안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의 핵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무조건 폐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추구해 왔습니다. 완전 항복하든지 아니면 체제 붕괴를 당하든지, 양자택일이라고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이라크가 다 보여줬잖아요. 미국이 공격해서 이라크 정부를 붕괴시켰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한 다 해도 미국이 북을 칠 것이다, 미국이 기어이 북을 공격한다면 그에 저항할 수 있는 물리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북한은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면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면 미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북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북으로서는 핵무기를 가질 이유도 의사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화도 하

지 않으면서 북을 계속 위협한다면 북한은 미국의 항복 요구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북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됩니다.

북경 3자회담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장소 제공 등 중개하는 입장이었고 사실은 북·미 2자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화에 응한 것은 자신의 선 북핵 포기, 후 대화 입장이 잘못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외교전에서 이긴 셈이죠. 하지만 미국이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북한은 북경 회담에서 미국에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아직 핵사찰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핵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양보한 것이지요.

미국으로서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받으면 북·미 간 대타결의 전환점이 마련되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제안을 받지 않으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되어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억제정책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 내 강온파간의 대립은 이런 상황을 반영합니다. 어떤든 현재 북한 핵문제는 고비를 넘겼다고 보입니다.

● 김근식 | 박기학 선생님의 말씀은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입장인데, 저는 북한 체제를 이해할 때 이중적인 면을 같이 봐야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공식 매체나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성명이 따로 있고,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과 외무부장관이 하는 말, 정부가 하는 말과 실제 정부가 고민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성명서나 북한의 성명서를 볼 때, 그것과 현실이 과연 얼마나 적합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

각입니다.

저도 박기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냉전 이후 북한이 시종일관 관계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데에는 절대 동의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미국의 태도를 외교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겠죠.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인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대외적 압살정책을 펴는 미국이 먼저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힘의 세계이고 그 힘이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원칙과 명분만 가지고 나간 것이 지난 10년, 즉 북한의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왔던 중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이고 민을 했더라면 제네바 합의 뒤 10년 동안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북한이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미국에게 빌미

를 주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 10월 이후에도 그런 실수들이 계속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실수를 지적해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를 평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도 확고하고 미국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둘 사이의 확고한 입장이 부딪치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을 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게도 스스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태현** | 1993~94년 북핵위기를 보면 북한이 별로 있지도 않는 카드를 매우 잘 이용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북한의 외교를 보면, 글썄 저는 북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꾸 한발 늦고 또 한 수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수로라도 보완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

한다는 거죠. 1999년 페리가 방북하고 조명록이 답방을 한 건 1년이 지나서였는데, 그래서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가고 클린턴 대통령도 방북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미국 대선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안 됐죠. 그게 조금 빨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소위 대법한 조치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늦은 거죠. 아마 작년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였을 때 그런 대법한 조치를 취했으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최고정책결정자의 판단이나 외교정책결정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 **정영태** |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외교적 목표가 체제보장이냐 아니면 경제회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대남정책, 한국정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3자회담이 있습니다만 북한은 계속 한국을

배제해 왔어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한국정부와 NGO를 구분해서 상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지, 한국정부는 못 믿고, NGO를 비롯한 민간과의 접촉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까?

● 김근식 | 체제보장과 경제회생 어느 것이 중요하나, 이것은 가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회생이 되어야 체제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면 과제는 체제보장이라 봐야 하죠. 김정일 체제에서 봤을 때 경제회생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보장은 김정일 체제가 지속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 체제가 무너지거나 교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회생에 매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경제회생을 장기적으로 끌어나기면 북한 사회주의 체제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김정일 정권의 교체나 붕괴라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듯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요구하는데, 이 문제는 한국정부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사회주의라는 체제보장과 김정일 정권의 인정, 이것을 한국과 담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하고만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런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죠.

단, 김영삼 전 대통령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에는 미국에게도 아무 말 못 듣고, 북한에게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귀머거리인 동시에 병어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제보장의 협상 대상으로서 당연히 미국을 설정한 북한으로서도 지금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 북한 공격이나 압박을 완화시켜줄 장치가 없어집니다. 이걸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북한은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는 일단



한국정부도 원론적 차원에서 핵과 경제교류를 연관시켜 북한 핵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미국이 유엔이나 한반도 주변국가들을 유도하고 있는 경제봉쇄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정수

유지해야 하고, 부차적으로 경제적 이득도 생기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입장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 정영태 | 자, 이제 한국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정욱식 | 일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즘 보면 북한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역시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언급했던 문제, 즉 '있는 그대로'의 미국을 보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미국을

보고자 하는 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핵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부시 정부에 대한 오판이죠. 그것이 당연히 문제의 책임이고 문제 악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어떤 문제해결 방식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핵무기를 통해서는 부시의 군사패권주의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줘야만 합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북폭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기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

으니, 북한으로 하여금 빨리 핵카드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무장이라는 군사적 억지력 대신에 정치적 억지력 확보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핵카드를 계속 고수하는 것과 핵카드를 버림으로써 국제사회나 미국이 '아, 북한이 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미국의 공격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더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이 역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줄을 놓아도 다치지 않도록 매트리스를 깔아주는 역할을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공개적인 방식보다는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고무줄을 놓았을 때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매트리스를 마련하는 것, 그 비결을 제시하는 것

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하고 중국, 가능하면 러시아까지 비공식 외교를 통해서 설득하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담판을 보겠다,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겠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정부가 먼저 북한과 대타협을 추구하는 이런 플랜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정수** | 그런데 한국정부는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경제교류나 통신산업을 유보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남북장관회담에서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철도연결,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만남 등에 관한 원론적 얘기만 했지, 경제교류에 대한 진전된 합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니 올해에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정부도 원론적 차원에서 핵과 경제교류를 연관시켜 북한 핵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미국이 유엔이나 한반도 주변국가들을 유도하고 있는 경제봉쇄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경제봉쇄를 한다고 하고, 한국정부도 이에 반대하며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와 북한과의 경제협력 지속 등이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도 해주지 않고 통신사업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정시켜 버린다면, 결국 북한을 한쪽으로 봉쇄하는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한국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공식 입장과 현실에서 보여주는 입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 정영태 | 아마도 두 가지 모두 취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북한 핵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경협도 추진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겠지요. 이러다 보니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있을 법한데요. 노무현 정부는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화 |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정부 내에서 남북교류를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노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노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남북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 앞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킨다면 이는 노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자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각종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

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에게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라고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무모한 대북 적대정책을 당당하고 자주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방미를 앞두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노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많은 양보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과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외교, 자주적인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태현 | 저는 북한이 대미협상 카드로 핵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국과 서로 엇갈리며 아예 협상국면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부분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이 불만스럽습니다. 북한이 핵문제를 가지고 협상하자고 나온 이상, 협상국면을 조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화는 하되 협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협상이란 채찍과 당근 두가

지를 겸비해야 하는 것인데, 미국은 채찍만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반면 우리 정부는 무력 사용이나 그 위협, 또 북한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는 경제제재 등 채찍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해 왔을 뿐 아무런 협상 카드도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아예 협상국면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양자회담만 고집한 북한의 책임도 있고요.

결국 미국, 일본, 한국은 협상에 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모아서 협상카드를 구성해야 합니다. 채찍은 미국이 휘두르겠다고 하니, 노무현 정부는 진작에 말한 대로 마살플랜에 버금가는 대북지원 패키지나 일본의 수교 패키지 등으로 당근을 보여주고, 북한에게 저렇게 아픈 채찍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당근도 있다고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아까 정욱식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줄을 놓았을 때 다치지 않도록 깔아주는 매트리스 같은 측면이겠죠. 미국 일각에서 북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사실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치·경

체제제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박기학** | 그런데 북한 체제를 시
장경제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북에 대
한 내정간섭이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화해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접근법 역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어렵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며, 본질상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통하고 있습니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경 3자회담에서 내놓은 북한의 제
안을 미국이 수용해야 합니다. 북은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네바 합의를 보면 터빈과 발전기, 원
자로의 핵심부품들이 들어오기 전까
지 핵사찰을 안 받게 되어 있는데, 핵
사찰을 지금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
까?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제안은 굉장
히 중요한 양보이고, 핵문제의 평화
적 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이 이 같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도
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각종 군사적 압박조
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 증강
배치와 실전군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광에 북을 폭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24대를 이동
배치한 것,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예행연습인 전시지원연습 RSOI과 독
수리연습을 한·미 합동으로 실시한
것, 북한 인근에서 정찰비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 같은 미국의 자
극적이고 도발적인 조치들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
국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는구나,
하고 미국이 북에 대해서 강경정책을
안 쓰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겠지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
이나 우발계획 같은 것을 함께 작성
하고, 북을 직접 겨냥한 군사훈련을
함께 하고, 군비도 증강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키
다 하고, 미국의 주장을 좇아 다자 간
대화를 하자고 입장을 바꾼다, 이런

식이면 미국은 남쪽이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따라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 김태현 | 대북투자 승인건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정부의 정책변화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승인이 없다는 것은 승인신청이 있는데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승인신청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사실 북한 핵문제로 정세가 어지러운데 누가 북한에 투자하려고 들겠습니까?

● 김근식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것과 관련 있긴 하지만, 북한의 변화라는 게 꼭 시장경제로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뿐더러,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의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교체라든지 북한사회주의 시스템의 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경제, 즉 경제발전과 관련한 북한측의 몸부림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측의 몸부림을 도와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존재하기도 하죠. 적어도 핵문제를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끔 막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동의나 의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북이나 미국이나 자기 뜻대로 갈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둔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렵습니다. 한때 우리는 미국과 같은 편이 되어서 적대외교로 계속 북한을 압박했던 말입니다. 이걸 이제 중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를 좀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강경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 저는 부시를 설득하고 협상하려 하기 전에 먼저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초기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시킨 다음에 설득해서 어떻게든 잘 하는 방향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요. 북에 대해서도 압박하고 요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친해지고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계속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불만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은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3만7천명이 와 있는데, 최근 노무현 대통

령을 보니까 북한하고는 친해지는데, 미국한테는 계속 큰소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한국정부가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북과 민족공조를 계속하려는 입장을 갖는 것처럼, 미국 강경파의 위압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화해를 지속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쪽 다 친해지려고 하는 게 어렵겠지만, 양쪽 다 친해지고 화해하려고 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정부가 지금 같은 곤혹스런 상황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북·미 관계의 개선에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잘 지내면 우리도 아주 편해지죠. 그러니 북한 핵문제의 해법은 한국과 미국이 기본적인 신뢰와 공조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계회복과 신뢰유지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이중적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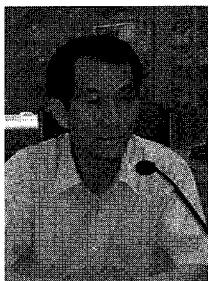
문제에 관해 북한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강경노선에 관해 미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우리 자신의 살길을 찾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 **김정수** | 한국정부가 북한이나 미국을 염두에 두고 매우 '탄력적'으로 국가적 목표를 조정한다고 표현하기는 뵈하지만, 흔히 한국정부는 북쪽에 맞춰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핵문제를 객관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닙니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고, 북이나 미국과의 관련 속에서 언제나 쌍방의 입장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가령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위기상황이 악화되어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거기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한국에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존권 보장

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라도 분명히 해야지 북한이나 미국에게 평화적 해결과 반전을 강력히 표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과 화해하라고 말한 다든지, 얼마 전 극동연구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논의됐듯이 부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데 노력하라는 주문이 강하게 제시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한국과 미국의 힘이 비대칭적인 현실에서 눈치를 잘 보고 오라, 뭐 이런 차원이었긴 했지만 말입니다. 좌우간 저는 한국정부도 한반도 핵위기에 관한 한, 북한과 또 다른 맥락에서 배타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 같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즉 우리도 나름대로 배수진을 치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노대통령이나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한·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영태

● 정영태 |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야 해요. 북·미 관계가 나빠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피해야 하고, 한·미 관계가 나빠져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사태해결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약 60~70%정도가 한국 독자적

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라면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압력을 가할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주한미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이나 주둔비용 증액, 또는 불필요한 군사 무기 구입이라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막고 가능하면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욱식 | 부시와 친해져야 한다는 김근식 박사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정부와 시민사회가 한·미 공조를 통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 한·미 공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미 공조는 이런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단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일단 1라운드 정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기본적이지만, 당장 북이 핵을 보유한 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무력사용도 불사해 북한 핵무장 저지를 최상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냐는 질문을 진지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경제가 봉쇄된다거나 안보상으로도 대단한 혼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핵문제가

계속 이런 형태로 갈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만, 더 상위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즉 만약 반전과 반핵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딜레마에 봉착한다면 어떤 원칙을 내세울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에 봉착할 경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추구해야 할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 파생되는 상황에 관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주변 국가들도 우려와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내외적인 우려와 불안, 혼란스런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에 관해 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내외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 점에 관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시민사회에서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결국 문제를 가라앉힐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태현** |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을 용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국무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도 북한 핵과 관련해 상반된 얘기가 흘러나올 만큼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화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관료정치상의 갈등입니다. 국무부는 본질상 대화를 통한 외교를 선호하고, 동맹국이나 우방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반면 국방부는 그 사명이 군사력 사용에 있죠. 그래서 현안이 나오면 서로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서로 다른 해법을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이 관료정치의 핵심입니다.

사실 탈냉전시대 미국외교는 국무부보다 국방부가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요. 어쨌든 관료조직이나 정부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 거기에 중지부를 찍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일단 한쪽 손을 들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 입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원칙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에게 이런 방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 **김근식** |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서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 노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부시를 설득하려 든다면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서 설득하려다가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2001년 내내 대북정책을 놓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잖습니까? 저는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이 미

국을 설득할 만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한 반미주의자는 아니구나, 주한미군을 쫓아내려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만 부시가 갖게 해도 노대통령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시도 노대통령에게 그런 인상을 주고요. 그래야 이번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반전·반핵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핵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 나서서 핵 보유 이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핵을 실전에 사용하려면 나름대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핵보유가 선언된 뒤의 상황에 관해서 차후 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북정회담에서 북쪽이 미국에 제안한 네 가지 양보가 뭐냐하면, 첫째 핵활동 전면 중단, 둘째 핵사찰 수용, 셋째 핵시설 폐기, 넷째 미사일 수

출과 실험 중지입니다. 이 네 가지 제안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는 제안들입니다.

그러니 미국 내부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의견일치가 안 된 상황이라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될 수 있는 한 이번 3자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내용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사실상 그 제안들이 좀더 합리적이고 동북아 평화에도 유리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내는 노력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기학 |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에 관한 한·미 간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자주적이지 못한 대미 자세로 볼 때,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미 관계의 불평등 해소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보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한·미 간 1차 협의가 4월 9일에 있었고, 2차 협의는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 미군기지 이

전,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 변경 등이 주요 의제로 되어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겠지요.

우선 주한미군 재배치(미2사단과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이남 배치) 문제인데요, 미국은 대체부지 5백만 평과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30억에서 50억 달러,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1백억 달러, 도합 1백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백50억 달러는 한해 국방예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계획에 따른 재배치가 우리 국민의 부담 아래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오히려 증강되는 식으로 이뤄진다면 영토주권의 훼손, 국민의 생존권 박탈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한·미 동맹의 주권훼손적 성격, 대북 공격적 성격은 전혀 해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대체부지 5백만 평과 이전 비용 전액부담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보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

보다는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으로 한국군과 미국군의 역할 재조정 문제인데요, 한국군이 대북 방위의 주임무를 맡고,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구조를 개편해서 동북아로 그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군이 대북 방위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군사비 증대와 각종 최첨단 정밀·정보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GDP의 3.4퍼센트로 올리겠다는 어제 신문 보도도 한국군의 역할 조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GDP의 3.4퍼센트면 23조원이 되는데 이전 중국에 버금가는 국방비입니다.

이것은 민중복지의 희생은 물론이거니와 남북한 사이의 군비축소가 아니라 무력 경쟁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군의 역할을 동북아로 확대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반도가 신냉전의 대결장이 된다는 말이죠. 중국을 겨냥한 한·미 동맹의 지역동맹화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배치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 시기를 미뤄주는 조건으로 많은 양보들을 강요할 듯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한 대체부지 500만평 문제입니다.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을 신축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화유적지에 외국 대사관을 짓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덕수궁터에 대한 지표조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처럼 불평등한 한·미 동맹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과연 얼마만큼이나 애기를 끌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라크 파병 당시 미국에게 보여줬던 굴종적인 태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대가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민족화해지구 통일협의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성남공항에서 자주의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 김정수 | 저는 이번에 방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안이나 요구를 이해하지만,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 민족의 존엄성이랄까 그런 것을 잃지 않는 방향에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역할과 과제

● 정영태 | 북한 핵문제나 전쟁위기와 관련해 시민운동이 갖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전평화를 위한 바람이 오히려 미국의 전쟁의지를 부추겨 우리만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정수 |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연대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민협의회'가 결성되는데, 이 협의회의 활동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단

체가 핵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으로는 새로운 시도로서 6월 초에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명과 시민단체 대표들, 정치학자들이 워싱턴, 뉴욕, LA 등을 방문해 의회, 로비스트그룹, 시민·종교단체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방문을 위해 한국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협력을 구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미국 내 평화운동단체들과의 국제연대라는 차원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국회의원과 동행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니,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게 아닌가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정치권과 시민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북·미 간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 반전·반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괄타결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왔습니다. 북한은 북경 3차회담을 통해서 대화

를 통한 해결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수용했지만, 반핵이라는 원칙은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에서 정치권이나 시민운동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기학** |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부속협정의 폐지 문제가 그것입니다. 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의 참혹한 죽음 등 주한미군의 범죄문제,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우리 땅을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자기 집 안방처럼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 미국이 우리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북한 전쟁정책을 펴는 문제,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고 미국이 일일이 간섭하는 문제 등은 모두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 동맹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방적·수직적 한·미 동맹 관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는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부속협정들입니다. 가령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군의 일방적 배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미군을 배치할 권리의 주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매항리처럼 주민을 상대로 야만적인 폭격연습을 벌이는 것이나 미군을 재배치한다면서 5백만 평의 대체부지를 내놔라' '이전 비용을 너희가 부담해라' 같은 일방적 요구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제4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들을 언제든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필리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그에 관한 양해사항을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결정하는 주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결정한 영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방위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곧 한

반도에 대한 영토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미국이라는 말도 됩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이는 한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결정적인 훼손입니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부속 협정인 한미합의의사록을 보면 국토 통일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형적인 불평등한 조약이고 대미 예측의 상징입니다. 한·미 소파도 이런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합의의사록, 전지지원협정, 군사특허비밀보호협정, 한·미 소파, 탄약협정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각종 부속협정들이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소파, 각종의 부속협

정들을 폐기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부속협정의 개폐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연구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진영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작업들을 해 왔고, 비록 민족자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와는 다른 입장에서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개정안도 제시해 왔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부속협정들,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기초해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한 요구들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근식** | 시민단체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군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 한국의 시민운동이나 시민사회는 정부와 완전히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모두 합의했던 것처럼, 당면 핵문제와 관련해 이미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고 북한이 나름의 의미 있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북한의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 하루빨리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바라고 한다면, 한국의 시민사회운동과 정부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가능성이나 무조건적인 협상반대 등을 봉쇄하고 미국 내 온건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공간과 기반을 만들어 내는 데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방금 박기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장을 포함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큰 줄기에서 미국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정부는 그런 것을 못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일 수 있으니 정부가 낼 수 없는

목소리나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시민사회가 대신해주는 것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태현 | 저는 세계화 시대고 민주화 시대이니까 시민단체가 외교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한 추세라고 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소위 양면게임 논리인데, 이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교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나 노동단체들이 파병반대를 외치니 심지어는 한나라당조차도 소극적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파병을 설득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외교에 이용해야죠.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게 빚진 게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경험이 적은 우리에게도 고도의 외교술이 요

구되는데……. 좌우간 이런 양면게임의 논리에서 보자면 시민단체들도 다른 나라의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맺어 초국가적 외교를 벌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그런 활동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급적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수** |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는 지금 <민족화해지구통일협의회> 같이 선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또 다른 시민단체의 고민이랄까, 비대칭적인 한·미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나 패배주의, 그 결과 나타나는 자기검열 같은 것을 시민단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도 사실상 평화운동의 커다란 과제와 묶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영태** |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장 세 시간 가량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쟁과 평화였

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가끔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파악하거나 대처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이나 강압적 방법을 동원할 경우, 결국 한반도에서의 군비만 증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전쟁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체제구축과 민족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침 일찍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